

## 韓國 經濟學敎育의 나아갈 方向\*

金秉柱\*\*

## I. 머리말

이 글은 한국 경제학과 한국 경제학敎育의 문제에 관한 필자의 소견을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논의전개에 있어서 오컴의 면도칼(Occam's Razor)로 날카롭게 밀어 가급적 군더더기 말들을 제거하고 골자만 양상히 세워, 지정 토론자를 비롯한 학계 동료들의 토론을 이끌어내는 화두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부모들 모두 제 나름의 일가견 있는 敎育전문가이듯이, 경제학자들 모두 경제학문제에 관한 제 나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활발한 토론이 기대된다.

## II. 경제학연구와 敎育의 문제

경제학이론이 어떤 발전과정을 밟아 발전해 왔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과거 경제이론들은 “죽은 자들의 그릇된 견해”일 뿐으로 일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일련의 깊은 통찰력이 축적된 것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죽은 경제학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높이 사는 것이다.

\* 본고는 “200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경제학회 주관의 제1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임.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를 달리 표현하면 절대주의(absolutism) 입장과 상대주의(relativism) 입장으로 구분 설명할 수 있다. 학문이 과거 오류투성이의 암흑으로부터 점차 진리의 광명으로 발전한다고 보는 것이 절대주의자의 시각이다. 즉 학문이 오직 내재적인 지적논리에 따라 발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이 오류를 벗고 진리에 근접하는 것으로 순위 매김 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상대주의자는 모든 이론전개가 동시대 상황을 반영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각개의 이론은 그 나름의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열순위 매김이 불가능하다고 본다.<sup>1)</sup>

Blaug는 두 견해를 적용하여 경제학의 누적적 발전과정을 중시한다. “오늘날 경제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오늘 아침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발견과 그릇된 이론, 우리의 통찰력 모두를 합친 것으로 본다. Pigou가 없었다면 Keynes가 없었을 것이고, Friedman이 없었다면 Lucas가 없었을 것이고, Lucas가 없었다면 또 그 다음도 없을 것이다”(Blaug, 1991, pp. X~XI).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제학설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연구활동에 무관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방금 언급한 Pigou역시 그랬다. Adam Smith 이전의 저술에 대한 논평요청을 받자, 그는 “현재 경제문제를 다룬 이론을 읽기에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데, 몇 세기 전 미비한 이론을 읽는 데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경제학설사는 흥미거리지만 진지한 연구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이에 대해 Blackhouse(1996)는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설사를 진지하게 다룰 것을 주장한다. 그는 경제학교육의 비역사성(ahistoricity)을 개탄한다. 많이 읽히는 중급 미시교과서 Varian의 Intermediate Microeconomics(1990)가 “utility” 개념의 역사적 발전을 소홀히 다룬 점, 거시교과서 Dornbusch & Fischer의 Macroeconomics(1994)가 주요논쟁을 얼버무리고 옳고 적절하다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이론(“established” doctrines that can be “asserted with great confidence” as right and to the point)이 존재하는 듯이 기술한 점 등이 비역사성의 노출이라고 비판한다. Blackhouse는 “많은 학문(철학·정치학)에서의 교육방식은 사계의 거장들이 주요 이슈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배우는 형태를 취한다. 경제

1) 이 부분 Blaug(1997, pp. 2~8) 참조.

학에서처럼 아이디어가 현대의 것이냐, 과거의 것이냐의 구별이 없다. Kant, Descartes, Aristotles를 공부하는 철학도는 과거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날의 관심사에 대해서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이 가지는 의미를 배우려는 것이다. 이는 경제학교육이 본받을 점이라고 지적한다(Blackhouse, 1996, p. 15).

90년대 미국의 대표적 소장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동시대 선배학자들에게도 거침없는 비판을 펴는 험구가로 소문난 Paul Krugman마저 경제학교육의 비역사적 교육을 개탄한다. 자연과학 분야의 위대한 발견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 분야의 전래된 이론과 학풍에 정통한 과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Krugman은 방금 졸업한 신출내기 Ph. D들을 상대로 신규채용 인터뷰를 하다보면 “IS-LM모형도 모르는 경기변동론 전공자, 경쟁적 균형도 모르는 산업조직론 전공자, Solow도 읽지 않은 신성장론 전공자”를 접하고 놀란다고 술회한다(Krugman, 1996, p. 140).

경제학의 연구와 교육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선진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경제학계 안팎에서 경제학 위기론이 끊임없이 개진되어 왔다. 미국경제학회에서 발간하는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Sept. 1982)는 1930년대 초에 Schumpeter가 집필한 글 “The Crisis in Economics Fifty Years Ago”를 실고 있다. Schumpeter에 의하면 경제학의 위기는 경제학계 내부로부터 불거져 나온다고 보았다. 그의 비판을 요약하면 대충 다음과 같다.

“경제학이 다루는 문제들은 현실의 이해 관계와 사회계급간의 분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일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경제학자들간에 과학적 명제 및 논리 이외에도 기질의 차이, 정치견해의 차이, 계급이해의 관심도 차이 때문에 구체적 현실문제에 관하여 경제학자들이 상이한 제안을 내놓는다. 일반사람들은 경제학자들간의 백가쟁명(百家爭鳴)을 보고 경제학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학자가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기본적 방법 및 결론에 관하여 의견차이가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와 과거에 걸쳐 끝도 없고 결론도 없는 수많은 논의들이 계속되어 온 것은 경제학의 저주이다. 논쟁의 어느 한편이나 양편 모두 ‘과학적 자질’이 결여된 데 그 원인이 있을 뿐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지 못하고 진실로 중요한 논점을 밝혀 내지 못한다. 그 광경을 보고 일반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과학적 자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난 수 세기 동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상들간의 일반적 관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얻어진 마음의 자세, 사고의 관습, 도구의 사용법을 뜻한다. 그 가운데 수학이 중요한 보조도구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념과 정리를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기술, 즉 이론 그 자체이다.”

“과학 또는 이론이란 상식을 체계화·정교화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일정한 유형의 현상이 나타나는 대다수 또는 모든 사례에 있어서 타당하도록 만들어 현실세계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비록 과학이 상식을 정교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 통상적인 사고방식이 전문가의 연구대상으로 되면,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방법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학이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학문이 지나치게 평이해지는 것은 그 학문의 장점일 수 없다. 그리되면 우수한 사람들은 떠나는 반면 열등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들이 학문의 발전과 정교화에 강력한 저항세력으로 대두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제학이 정밀과학으로서 확립되었지만 그 사실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것을 충분히 습득하여 발전시킬 경지에 이른 사람은 더욱 극소수에 불과하다. 서글픈 사실은 오늘날 경제토론을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신이 말하고 있는 말뜻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경제학의 기본적 문제이다. 만일 경제학을 철저한 훈련과 오랜 경험을 통하여 연마해야 하고, 경제학의 여러 기법들을 통달하기 이전에는 경제학이나 경제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제학자들이 깨닫기만 한다면 경제학의 두드러진 문제들의 대부분은 사라질 것이다.”

이상은 70년 전 Schumpeter의 논평이었다. 그는 경제학이 정밀과학으로서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에도 타당한 논평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학문의 정밀성(exactness) 또는 엄밀성(rigor) 때문에 현실경제와의 적합성 여부 문제가 깊어지게 되었다.

경제학을 정밀과학으로 확립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은 C. Menger (1840~1921)가 G. Schmoller (1838~1917)를 태두로 하는 신역사학파에 대해 포문을 연 방법논쟁(Methodenstreit)으로 고조화 되었다. 이 같은 논쟁과 별도로 한계학파(Marginalism)의 등장과 일반균형적 접근필요성은 경제학의 수리화와 계량화를 촉진했다.

천부적 수학재능을 가졌던 A. Marshall은 경제학연구에 수학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절차를 밟았다고 술회했다.

“첫째, 연구의 원동력(engine)이 아니라 속기문자로 수학을 사용한다. 둘째, 연구 끝까지 수학을 쓴다. 셋째, 평범한 언어로 번역한다. 넷째, 현실생활의 중요사례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해 보인다. 다섯째, 그 다음 수학을 버린다. 여섯째, 현실 적합성이 없으면 버린다.” 다시 말해서 Marshall의 경우 수학은 경제학연구에 있어서 모순 없는 논리전개를 위한 수단이었다.

그 이후 수리적 접근, 정형화된 계량모델 등이 경제학 교육 및 연구에 있어서 때로는 단지 하나의 수단이기보다 목적으로 격상되는 듯 보였다.

경제문제를 모델을 만들어 분석하는 연구방법은 매우 유익하다. 그러나 정형적 모형(formal modeling)에는 편익(benefits)과 동시에 비용(costs)이 있다. Mayer (1996)는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한다. “정형화된 모형은 첫째, 선형적 사고(linear thinking)를 내포하고, 둘째, 연구목적에 대한 수단이다. 목적을 희생하고 수단에 역점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 셋째, 모든 사고는 모형을 함축한다. 정형적 모형만이 “과학적”이며 적합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Mayer, 1996, p.192). 독자가 논문을 읽는 시간과 노력을 추가적으로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정형화된 모형이 효율적 의미전달 수단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어찌 되었거나 근래에는 수리계량모형이 아닌 논문이 미국 등 선진국의 일류 전문학술지에 실리지 못하게 되었다.<sup>2)</sup>

이미 오래 전부터 대학 정규교육 과정에서 경제학을 선택해 많은 여타 분야의 졸업자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학문적 발전을 이끄는 사례가 늘어났다. 특히 이공계 출신들이 수학적 재능 덕분에 경제학으로 전공을 옮기면 경제과 전공자들보다 개척적 업적을 이룩하기 수월한 시대가 되었다. 말하자면 “고등수학이나 엄밀과학으로부터의 도피자들”(refugees from higher maths or higher sciences) (Galbraith, 1996, p. 76)이 경제학 전공자들보다 오히려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는 현상이 지속되어왔다.

경제학은 오랫동안 자연과학과 생명과학 등 엄밀과학(hard sciences)을 동경하며 그들의 연구방법론과 용어들을 모방해왔다. 독일의 역사학과 W. G. F. Roscher나 미국의 기인 경제학자 T. B. Veblen이 경제학을 생물학처럼 발전시켜 “진화론적 학문”(evolutionary science)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신고전 경제학과의 미시이

2) 필자의 경우 한때 만만해 보이던 AER마저 이제는 난해한 글들을 주로 읽고 있다.

론 용어들이 물리학으로부터 차용해온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Malinvaud(1997)는 “경제학이 엄밀과학(hard science)이 되었는가?”라고 묻고 있다. Malinvaud는 답한다. “지난 반세기에 걸쳐, 경제학이 엄밀과학에 근접해왔다 ... 그러나 아직 양자간에는 거리가 있다. 경제학은 현상의 설명과 현상에서 도출되는 규칙에 있어서 엄밀과학보다 신뢰성도 떨어진다 ... 나는 엄밀과학과의 거리가 미래에도 줄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가진다 ... 이런 의미에서 양자간의 접근은 사실상 끝났다. 즉 경제학은 계속 발전할 것이지만, 역시 계속 발전하는 엄밀과학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을 것이다”(Malinvaud, 1997, p. 9). Malinvaud는 이어 “경제학자들의 연구도구들이 불필요하게 정밀화되고(sophisticated) 있지 않는가”하는 불만에 대하여 문제를 시인한다. 그는 이 문제가 주로 일류대학들의 연구업적 평가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학문에 있어서 연구가 정밀화(sophistication)와 순수이론화(academism)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변이현상(deviation)이라고 보았다(Malinvaud, 1997, p. 15). Malinvaud의 다음 솔희가 세태의 변화를 실감나게 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수리경제학자들과 계량경제학자들을 수상한 눈으로 보고 수리계량도구 없이도 경제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된 다음에야 동료로 받아주었다. 세태는 크게 변했다. 이제는 흔히 수리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판단 기준이 된 듯 보인다. 이것은 좀 지나치지만, 돌이키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근래의 불만은 “수학과 고급기법에 대한 맹목적 열광의 종언을 예상”하게 만든다.

이상 소개한 경제학 선진국의 문제는 그대로 한국 경제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 Ⅲ. 한국 경제학의 연구와 교육의 문제

앞에서 언급한 학문의 절대주의 입장은 이론의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을 중시한다. 19세기 독일 역사학파는 영국 고전경제학파의 영구주의(perpetualism)와 세계주의(cosmopolitanism)를 비판하고 절대주의에 대한 상대주의적 반론을 제기했다. 즉 이론은 시대상황 속에서 역사발전단계에 걸맞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는 과정에서 잉태·성장하는 것으로 보았기에, 고전학파주의처럼 언제나(어떤 발전단계에나) 어디서나(이질적인 전제문화, 제도 등 차이를 무시하고 어떤 국가에서나) 타당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같은 독일 역사주의(historismus) 입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학 기초원리들의 절대주의적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예컨대 수확 체감, 한계효용체감, 소비자와 생산자의 조건부 최적화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원리들은 19세기든 21세기든, 시장경제이든 계획경제이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무관하게 관철되는 원리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주의의 지적처럼 시공의 제약하에서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경제사회가 고심하는 경제과제가 다르고 접근방식이 다를 수 있다. 경제학에 무슨 미국 경제학이 있고 한국 경제학이 있느냐는 입장은 분명 절대주의적 입장이다. 한국 경제학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도 기초원리의 절대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한국 경제학”이란 무엇인가(김병주, 1984 참조). 그것은 아마도 첫째 한국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경제학, 둘째 한국의 당면 경제과제를 다루며 그 해결방안을 고심하는 학풍, 셋째 한국인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프로그램, 넷째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려고 고심하는 학풍 및 연구프로그램 동일 것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마지막 정의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 경제학”을 그렇게 정의하고 나면, 한국의 대학들이 어떤 교육을 젊은이에게 제공하고 있는가를 반성하게 된다. F. List의 1845년 “우리 대학과 현재의 중대한 경제문제”라는 제하의 짧은 글을 반추해볼 가치가 있다. “옛 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그것은 노쇠 중인가, 자유표현의 두려움 탓인가? 독일의 어느 대학이 아직도 시대의 움직임을 대변하고 지성과 학문의 횃불을 들고 앞길을 비추고 있는가? … 독일 대학들은 이미 심장부까지 녹슬고 있다 … 교수가 노랗게 낡은 강의노트를 백 번째 낭독하고 있을 때 시대의 열망에 대해 무감각하다 … 전수된 지식이 과거방식 그대로 아주 새로운 것인 양 강의되고 있고, 강의실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 우리의 대학 경제학자들은 자신의 조국보다 외국의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듯 하다. 경제학자들의 무관심이 오직 무지 또는 편협 또는 악의에서 비롯된 것일 수밖에 없다.”

19세기 전반 독일학자들이 선진국(영국) 경제이론을 수입해 앵무새처럼 반복하거나 단순가공하는 모방학습단계에 있던 대학 경제교육 현실에 대하여 List가 통렬하게 일침을 가하는 글이었다. 21세기 벽두 한국대학의 경제학 교수들도 대부분 수입

이론의 중간 도·소매상이란 비판을 면할 수 있을까.

1997년 외환위기와 IMF 긴급구제 금융사태를 경험하면서 1세기 반 전 List와 같은 참담한 고뇌를 경험하고 자신의 대학강단교육을 반성하고 향후 연구프로그램 조정을 생각해 본 경제학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국 경제학”은 이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서구의 경제학이 도입·교육된 지도 어언 1세기가 넘었다(이기준, 1983 참조). 그러나 그간에는 선진국으로부터 근대경제학을 전수받아 그대로 이전시키는 데 대부분의 노력을 경주했다. 지식의 창조적 재생산 없는 단순이전이 고작이었다.

한국 경제학의 문제는 학문의 역사가 짧은 데다 깊은 단절이 여러 차례 반복된 데 있다. 첫 번째 단절은 전통사회의 경제사상(예컨대 實學)이 서구 근대경제학의 도입과 접목되지 못했고, 두 번째 단절은 일제하에 경험한 세계불황의 여파와 맑시즘의 풍미로 야기되었고, 세 번째 단절은 해방 후 60년대 중반까지 교수진의 미비로 학문다운 경제학의 부재로 빚어졌고, 네 번째로 해외유학생들이 대거 귀국하기 시작한 60년대 후반(특히 70년 초 KDI설립, 대학의 신규교수 대량채용 등) 이후, 주로 미국식 경제학교육 및 연구활동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또 한번 과거와의 단절이 발생했다. 따라서 한동안 과거 선배학자들의 학문적 업적을 활용하고 이를 기초로 계승발전시키는 노력과 전통이 확립되지 못했었다. 1980년 이후 이점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경제학교육·연구의 축적과 재생산이 아직까지 본격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증거로서 외국유학에서 갓돌아 온 젊은 학자들이 자기 분야에서 공동연구 할 동료나 선배가 없고, 연구여건이 불비해 다시 출국하거나 그런 용의가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들 수 있다. 연구여건이 일류선진국 대학이나 연구소만 못하더라도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한국적” 연구과제와 씨름하여 새로운 지식을 발굴하고 축적하는 노력을 경주하도록 유인할 요인들이 없을까?

첫째로 한국은 경제문제가 많은 나라다. 이는 곧 연구과제가 많다는 뜻이다. 연구의욕이 왕성한 학자들에게는 도전의 기회가 많은 곳이다. OECD가입국이며, 뉴욕증시와 동시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있지만, 아직 후진국 특징이 많이 남아있어 선진국 경제이론의 적절한 수정·변형, 새로운 분석모형의 개발 등이 요청된다.

둘째로 경제학이론이나 분석도구들은 그것을 이용하기에 적합한 경제문제들이 있고 부적합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한국현실에서 터득할 기회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 강단에서 선진국 경제교과서의 초점이 한국 현실과제들에 맞추어져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 많다.

셋째로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 즉 구조조정 중요성을 깨닫게 만든다. 경제학의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 학제적(interdisciplinary) 관심을 갖도록 연구영역을 넓힐 필요성을 깨닫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주장이 경제학 논리를 압도하는 경험사례들이 경제학자들에게 좌절과 번민을 안겨준다. 정치현실에 대한 경제논리에속은 선진국에서도 물론 관찰되는 것이다. 경제논리에속이 한국보다 더 심한 나라들도 허다하다. 여기서 경제학자들은 학문의 제약과 학자로서의 겸손을 터득하게 되는 동시에 시장경제원리의 주장이 암묵적으로 권위주의 권력의 점진적 폐위로 연결될 수 있다는 데서 은밀한 흥분을 맛볼 수 있다.

이상에서 간추려 보였듯이, 한국은 경제학의 특이한 임상병리학(clinical pathology)을 위해서 더 없이 좋은 연구병동인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재출국하는 소장학자들은 선진국에서 배워익힌 재간의 임기응변의 노력을 기피하는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인 반면, 한국체류자들은 현실의 모순을 손에 묻히기를 기피하지 않는 용기 있는 연구자들이라 평가하고 싶다.

우리나라 경제학교육<sup>3)</sup>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준구(1989)는 우선 두 가지 우리 대학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하나는 교육자가 분석·응용·토론의 능력을 배양하기보다 일방통행식의 강의를 답습하고 있고, 이는 학생들이 각종 고시를 비롯한 자격시험, 취직시험에 대비하는 암기위주의 학습태도와 상부상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 외부의 각종 고시문제 출제자들 역시 교수임을 고려하면 더욱 교수들의 책임이 무겁게 자각된다. 다른 하나는 대학들이 각각 중점분야를 선별 육성해 비교우위를 통한 전문화를 이룩해 상호경쟁 및 보완을 추구하기보다 백화점식으로 모든 분야를 담당하는 인력을 분산충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간의 연구인력 풀(pool) 제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연구소가 아닌 이상 일정한 규격의 교과과정 개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 같은 제안의 대폭적 채택

3) 대학 등 교육기관·연구소에서 연구·강의하는 것을 “경제학”이라 한다면,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경제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나, 일부지역에서 대학원간 학점교환제를 이미 실시 중에 있다. 미국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있어 Galbraith(1997)은 대학의 경제교육의 “hub and spoke system”의 필요성을 제안한다(Galbraith, 1997, p. 80).

이준구는 이에 또 하나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는 국내 경제학자들이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학계의 발전과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주적인 한국 경제학을 정립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한다(이준구, 1989, p. 126). 근래에는 교수업적평가제가 정착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나, 외국학술지 게재논문과 국내발표논문과의 평점차이로 이 같은 정신분열증세는 더욱 고조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찌 되었거나 이준구(1989)는 “자주적인 한국 경제학”을 “우리 경제현실에 부합되는”, 또는 “우리 체질에 알맞게 재단된” 경제학으로 부연설명하고 있어 앞서 소개한 필자의 한국 경제학 개념의 마지막 정의와 대체로 일치하는 개념이다.

이준구(1989)가 말하는 “자주적 한국 경제학”이란 용어가 듣기에 따라 정치적 함축의미가 있는 듯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한국경제 현실의 정책, 사례 등 소재를 담은 논문, 교과서, 강의 등을 통하여 피교육자들의 흥미 고취, 수용력 제고 등 교육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그의 논지를 돋보이게 하는 용어이다. 바로 이점이 필자의 오늘 발표하는 글의 논지이기도 하다.

1997년 IMF 긴급구제금융을 받아들인 환란 이후 경제학교육에 대한 경제학자의 자기반성은 보다 깊어졌다. 이지순(1999)은 경제학교육에 대한 학생으로부터의 비판으로 “강의나 교재가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며, 가르치는 이론이 너무 서구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경제학을 배워봐야 취직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을 열거했다. 기업체 등 졸업생 수요측의 대학교육 비판은 따가웠다. “종합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지성인을 양성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경제기술자만 만들어낸다, 전인교육을 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인간만 배출한다, 경제학을 배운 학생들이 경제현실을 너무 모른다,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등 문제를 나열했다(이지순, 1999, p. 19). 이지순(1999)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하여 경제학이 배우기 “어려운 학문”이고 경제현실과 동떨어져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 관계를 언급하면서도, “경제학 교수들 노력여하에 따라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흥미를 유발하며 가르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시청각 교재를 적절

히 활용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쌍방향 학습도 가능할 것이다. 무조건 난해한 이론들을 주입식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한국경제의 현실을 적절한 예제로 활용하여 쉬우면서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필할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이다. 강의나 교재에서 한국경제의 현실을 실례로 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지순, 1999, p. 19).

#### IV. 맺음말: 경제학의 부활을 위하여

한국 경제학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다. 소위 일류대학에도 입시에서 우수학생들의 경제학과 기피경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각종 고시에서 경제학 과목이 수험과목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일반 기업체 등 졸업생 취업처에서도 경제학과 졸업생들을 반기지 않는다. 이 같은 현상은 물론 주로 외부세태의 변화이지만, 우리는 대학강단의 교육과 무관하지 않을까 반성된다. 경제학 시대가 끝나는가? 김병주(1999)를 약간 수정 가필해 이 글을 마감한다.

“경제학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이 E. Burke의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1790)에 처음 나온다. 혁명의 와중에서 여왕의 처참한 최후를 지켜보고, 한때 그녀가 한 몸에 누리던 군중의 환호와 사랑이 어디 갔나를 개탄한다. 기사들의 시대는 가고, 경제학자들, 억지 이론가들, 계산가들의 시대가 이어졌다. 유럽의 영화는 영원히 사라졌다고.”

“A. Smith 이래 경제학자들의 영향은 점차 커지고 20세기에는 경제학이 사회과학의 여왕이며,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경제학자의 위세는 제왕처럼 막강했다. 이것은 대공황의 깊은 늪에 빠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구원한 케인즈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공산주의 명령경제라는 인류사상 전대미문의 비극적 대실험을 감행하게 만든 장본인도 칼 맑스였다. 좋은 나쁜든 경제학자는 몸은 죽어도 사상은 살아 때로는 일세를 풍미한다. 그러나 21세기의 문턱에 서서 경제학의 위세가 꺾이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그것이 단순히 명령경제체제의 붕괴 탓이라면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보다 깊고 위급하다.”

“Smith 이전에는 물론이지만 이후에도 경제학이 대학강단에 선 전문인에 의해서만 개발되지 않았다. 저마다 시대적 과제, 현실사회문제를 다루면서 이론이 나오고

토론이 벌어지면서 학문이 발전했다. 19세기 초반 곡물법 논쟁이 없었다면 D. Ricardo T. R. Malthus가 이름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고, 미국의 보호무역을 보지 못했더라면 독일의 F. List는 역사학파의 선구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문제와의 관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역사, 이론, 정책의 구분을 혼미하게 만드는 신역사학파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방법논쟁이 벌어지고 이론경제학의 엄밀성은 강화되었다. 엄밀성의 대가로 지불된 것이 현실과의 관련성이었다. 19세기 후반 한계학파의 등장, 일반 균형이론의 확산에 따라 경제이론의 현실도피 성향이 짙어졌다. 경제학의 엄밀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문(mantra)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다수를 국외자로 외면하는 밀교(密敎)처럼 되어가는 느낌이 있다.”

“R. Heilbroner의 말처럼 위대한 경제학자는 인간행위 중 가장 세속적인 것, 부의 추구행위를 철학체계로 포용한 세속적 사상가(worldly philosophers)였다. 경제학에서 분화·성장한 경영학에 대하여 경제학자들이 보내던 한때의 비아냥거림이 양감음되고 있다. 정부주도형 경제개발 시대가 곧 시장경제 시대로 전환되어 경제학자들이 정부고객을 잃었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비롯해 시장, 질서 등 제도 측면의 관심과 떨어진 거리가 학문의 순수성과 정비례한다고 보는 것이 상아탑 학자들의 관점이었다. 학문은 학자들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충돌, 조화하면서 발전한다. 경제학도 그렇다. 그러나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현실의 시장과 제도를 천착하고 개선방안을 구상하는 실천적 탐구자여야 한다. 여기가 지뢰밭이다. 정부와 기업이 근접해야 정보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때로는 접촉 폭발사고 위협을 무릅쓰는 곡예사가 되어야 한다.”

“캠퍼스 안에서는 학술지의 수준향상, 근친상간적 인사추방, 토론문화의 정착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기초 경제이론에는 국경이 없지만 시간과 공간에 따라 연구과제의 내용과 우선순위가 다르다. 한반도 통일의 경제사회적 과제는 한국 경제학자의 최대 관심사이지만 타국민에게도 그러할 수 없다.”

“회랍(신화의) 이카로스(처럼) ... 경제학은 자연과학을 향해 비상하다 사회과학으로 추락위기에 봉착했다. 엄밀성이 처진 학문은 잡스러운 낯두리이기 십상인 반면, 현실관련성을 무시하면 내시들의 학문이 된다. 근래 한국 경제학자들의 무기력증은 연구영역과 관심을 스스로 좁혀 자초한 탓이 아닐까 한다. 상아탑 속은 아늑한 무풍지대다. 그러나 학계, 기업계, 정부와 함께 학계가 앞장서 국민경제문제로 고심

하는 연구풍토를 만들어야 경제학 터전이 넓고 튼튼해진다.”

## ■ 참고 문헌

1. 김병주, “한국 경제학의 문제란 무엇인가,” 김병주·박영철(1984), 『한국경제와 금융』, 박영사, 1984, pp.13~22.
2. ———, “경제학, 이카로스의 비상과 추락,” 문화일보, 1999.12.9.
3. 이기준, 『교육한국경제학 발달사』, 일조각, 1983.
4. 이준구, “한국 경제학교육과 연구의 현황과 과제,” 주요국의 경제학연구와 교육, 서울대 경제연구소, 제15회 경제학심포지움, 1989, pp.101~128.
5. 이지순, “한국 경제학의 진로,” IMF경제위기와 한국 경제학의 반성 및 과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1989.
6. Autume, Antoine d' and Jean Cartelier(ed.), *Is Economics Becoming a Hard Science?*, Edward Elgar, 1997.
7. Blackhouse, Roger E., “Economics is a Historical Process,” Medema & Samuels, 1996, pp.7~16.
8. Blaug, Mark,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5th ed., 1997.
9. ———(ed.), *The Historiography of Economics*, Edward Elgar, 1991.
10. Galbraith, James K., *What is To Be Done(about Economics)?* Medema & Samuels, 1998, pp.76~81.
11. Krugman, Paul, *How To Be a Crazy Economist*, Medema & Samuels, 1998, pp.131~141.
12. List, Friedrich, “Unsere Universitäten und die grossen ökonomischen Fragen der Gegenwart,” *Das Zollvereinblatt*, Nr.23, Dritten Jahrgang. 10. Juni. 1845, pp.419~420.
13. Malinvaud, Edmond, *The Rapprochement of Economics and The Hard Sciences, An Irreversible Movement That Has Reached Its End*, Autume & Cartelier, 1997.
14. Mayer, Thomas, *The Dark Side of Economic Modeling*, Medema & Samuels, 1996, pp.191~203.
15. Medema, Steven G. and Warren J. Samuels, *Foundations of Research in Economics: How Do Economists Do Economics*, Edward Elgar, 1996.
16. Schumpeter, Joseph A., “The Crisis in Economics-Fifty Years Ago,”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 Sept. 1982, pp.1049~1059.